

야3당 “8인 개헌협상회의 추진해야”

(비밀·민평·정의)

민주·자유한국당 향해
국회 헌정특위 가동
5월 국회서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 등 촉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문관에서 야3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들이 개헌연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헌정특위 간사,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심상정 헌정특위 간사, 민주평화당 김광수 헌정특위 간사.

민주평화당 헌정특위 간사로 활동 중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16일 국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성사를 위한 '야3당 개헌연대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야3당(민주평화당·정의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위원장 및 간사를 주축으로 하는 '야3당 개헌연대'는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연내 개헌 성사를 위해 ‘8인 개헌협상회의’를 즉각 추진시켜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야3당 개헌연대”는 “거대 양당의 진흙탕 싸움으로 공전되었던 국회가 42일 만에 정상화 되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회공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는 국민과 민생을 불모로 하는 구태정치를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대 양당의 타협 없는 정치, 4인 선거구 조개기를 통해 여실히 보여준 기득권 나눠먹기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불씨가 사라지고 있는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31년 만에 찾아 온 개헌의 기회

는 청와대와 거대 양당이 만든 것이 아닌 ‘촛불혁명을 완성하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으로 시작된 것임을 분명히 해준다”고 밝히며 “8인 개헌협상회의” 즉각 추진, 개헌 논의를 이어왔던 국회 헌정특위를 가동하고 활동기한 연장, 연내 개헌을 위한 사전조치로 5월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야3당 개헌연대’는 “천신만고 끝에 정상화된 국다. 31년을 기다려온 개헌열차를 이대로 멈춰 세울 수는 없다”며 “당초 합의했던 ‘8인 개헌 협상회의’를 개최 가능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대타협을 이뤄 연내 개헌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

조했다.

한편, 이날 ‘야3당 개헌연대 기자회견’에는 김동철, 장병완, 노회찬 의원 등 야3당 대표를 비롯해 김광수, 김관영, 심상정 헌정특위 위원장 및 간사가 참석해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성사를 위한 거대양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민주당 20대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문희상 의원

제20대 국회 후반기가 이틀 더 붙어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16일 6선의 문희상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 선거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총 116표 중 문 의원이 67표, 박 의원이 47표를 얻었다. 무효표는 2표다.



문 의원은 당선 소감으로 “정치한 지 40년인데 그 동안 파란만장한 정치 인생을 밟으면서 오늘 같은 날도 잊지구나 생각이 든다”며 “애초에 얼굴 큰 사람 뽑자, 무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 뽑자 했으면 걱정을 덜했을 텐데 가슴 깊이 우려나오는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농담을 섞으며 감사함을 전했다.

이어 “국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국회가 펄쩍 살아있을 때 민주주의도 살고 정치도 산다. 다시 서는 국회, 국민 사랑과 존경받는 국회를 반드시 이뤄나기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원내 제1당의 의장 후보가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신임을 받아 국회의장을 맡는 것이 관례로 굳어져 있는 만큼 문 의원이 추후 본회의를 통해 의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가 정세균 현 국회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9일이 되기 5일 전까지 본회의를 열어 추인해야 한다.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투표를 거쳐야 의장으로 최종 선출된다. /뉴스



다자녀 공군인 격려행사 공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6일 계룡대 무궁화회관에서 이영근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2018년 다자녀 공군인 격려행사”를 진행했다. (사진=공군 제공)

추경안 성장지원펀드 300억 삭감

국회 정무위, 추경안 성장지원펀드 300억 삭감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3조9000억 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 소관 내용인 1000억원 규모의 벤처기업 지원 ‘성장지원펀드’와 266억5000만원 규모의 지역산업 구조조정 지역 지원 대책인 ‘신용보증기금’ 예산안을 심의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와 예산안 소위원회회를 동시에 열고 이같은 정부 추경안을 심의 후 의결했다.

이날 예산안 소위에서는 정부 원안 중 산업은행 출자 성장지원펀드에서 300억원을 삭감하고 대신 신용보증기금 300억을 증액하는 안으로 수정 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원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통영과 전남 군산 지역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금융 지원하기로 했으나, 소위에서는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증액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삭감한 성장지원펀드는 본예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앞서 상임위에 비심사를 이날 오전까지 마쳐달라고 요청해 이날 회의는 속전속결로 진

행됐다.

김동태 정무위원장은 “예산 소위와 전체회의는 별개로 시작하겠다”며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빨리 심의, 의결해서 넘겨달라 했다”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상황을 이해해주면 투 트랙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이게 하도 처음 겪는 일”이라고 난감함도 표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조속 처리로 인한 부실 심사의 우려도 나왔다. 아울러 일부 정무위 위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유동봉 바른미래당 의원이 “예산 소위를 늦추면 안 되느냐”라고 요구한 뒤 “오늘 중에 하면 되는 건데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했다.

유 의원은 통화에서도 “오늘 같은 일은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추경안 이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는데 대한 목소리도 냈다. 그는 “이번 추경안 구조조정 (지역) 지원 예산 등이 들어있다”며 “GM(한국 지엠) 사태로 생긴 군산 지원 등도 있는데 왜 (GM이) 폐쇄됐는지 원인이 모르지 않나”고 질책했다. /뉴스

민주당, 6·13 지방선거 10대 공약 제출

청정분권·균형발전·성평등·한반도 평화 등 포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6·13지방선거 10대 공약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10대 공약은 지방선거 슬로건인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성장·변화·공정·평화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 과제를 10개 분야로 정리한 것이다.

청정분권과 균형발전, 모두가 희망찬 민생경제, 상생하는 공경경제, 보육·교육·복지·주거의 국가책임 강화와 어르신,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 성평등 사회와 가족행복 등이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청년행복, 미세먼지, 해결, 국민생활안전,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 등 지난 14일 발표한 5대 핵심약속도 10대 공약에 이름을 올렸다. /뉴스

민주당은 ‘청정분권과 균형발전’ 과제로 제2국무회의(국가차지분권회의)와 자치경찰을 2020년까지 도입하겠다고 명시했다. 광역교통망 혼란 등을 해결할 광역교통청은 올해 설치를 공약했다. 광역버스 및 수도권 광역 전철망 확충과 혁신도시 시즌 2 및 도시재생뉴딜은 2022년을 제시했다.

‘모두가 희망찬 민생경제’ 과제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보장과 상가세입자 권리 보장 등을 지목했다.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와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현행 5년→10년 연장)은 2019년까지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광역시도 5대 공약은 시도지사 후보자가 관할 선거구로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

北 돌발변수에 靑 ‘신중모드’

文대통령, 한미정상회담 준비하며 현안 수시 보고받아
고위급 회담 불발에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 후 회의 못해

청와대는 16일 북한의 남북 고위급 회담 중지 통보에 긴박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 없이 오는 22일 한미 정상회담과 다음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에 임박해 터진 돌발변수를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운영чан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현재 상황은 오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 진전된 상황도 없다”면서 “다만 지금의 상황은 같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지난한 과정이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진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0시30분 리선권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 통지문을 통해 한미연합공중훈련과 탈북민의 대북 비난 발언을 규탄하며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급 회담은 이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별도 담화에서 “다가오는 조미(북미) 수뇌회담에 응하겠다는 것을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새벽 북측의 통보를 받자마자 통일부·외교부·국방부 등과 전화 통화로 긴급 논의를 벌였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이날 아침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도 북한의 고위급 회담 중지 통보 사건이 비중있게 논의됐다. 회의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진위를 파악해야 한다”,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조심스런 접근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식일정 없이 여새 남은 한미 정상회담에 매진할 예정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과 미국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아침마다 진행되는 참모진 티타임 회의에서도 북측 통보가 심도있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날 사건과 관련한 공식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도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결정 등 굵직한 대북 이슈가 터질 때마다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도 없었다. 최대한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태도로 풀이된다.

북측의 고위급 회담 중지 통보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핫라인(직통) 통화를 할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확신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핫라인 통화는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핫라인 통화가 고위급 회담 중지를 계기로 성사되면 무게감이 떨어지고, 확대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논의 의제가 늘어남만큼 오는 22일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언제든 핫라인 통화가 진행될 수 있다.

아울러 고위급 회담이 기약없이 미뤄지면서 2018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회 회의 소집도 이뤄지지 못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관련 의제가) 조금 진척이 되면 그 내용을 받아서 이행 추진위 활동을 진행하는 식”이라며 “고위급 회담이 오늘 예정돼 있다”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행추진위 회의는 아직 잡혀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성명을 통해 “정부는 판문점선언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북측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조속히 회담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스

군산출신 바미당 의원들, 지엠 군산공장 해법 릴레이시위

김관영·김종로·채이배 의원 등

바른미래당 소속 군산 출신인 김관영·김종로·채이배 의원은 16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해법 도출을 요구하며 청와대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8일 지엠과 산업은행이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기본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오늘 당장이라도 군산 공장 해법에 대한 추가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0일 산업은행의 지엠 7억5000만 달러 출자 등을 담은 잠정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대책엔 군산 공장 해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최종 합의 발표 이후 간의 협의과정을 확인해보니 협상을 담당했던 기획재정부, 산업부, 산업은행 등은 부처도 군산공장 해법을 회의 안건으로 올려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정부부처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군산 공장 해법방안에 답을 내놓고,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에게 그 이행 요청 방안을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아울러 이날 김관영 의원을 시작으로 한국지엠 군산공장 해법 도출시까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들은 “군산공장 해법을 위한 대통령의 책임은 단번이 있을 때까지 청와대 시위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

민평당 전주시장 경선, 시민·당원 5대5

6·13 지방선거 민주평화당 전주시장 후보 선출을 두고 야기된 후보 간 경선 갈등이 절충안으로 봉합될 전망이다.

16일 평화당 전북도당과 임운상, 이현웅 후보 등에 따르면 완전시민경선과 당원경선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전주시장 경선에 대해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타협적인 ‘시민·당원 5대5’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임운상, 이현웅 두 후보가 주장하는 방식을 한 발씩 양보하라는 것으로 후보들이 수용할 경우 빠르면 주말께 최종 방식을 예비후보자에게 통보하고 경선을 마무리 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주시장 브리핑룸을 찾은 임운상 후보는 “양보를 요구하는 중앙당의 5대5 방식에 따르겠다”고 수용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현웅 후보는 “시민경선 후보 선출을 두고 야기된 후보 간 경선 갈등이 절충안으로 봉합될 전망이다.”

16일 평화당 전북도당과 임운상, 이현웅 후보 등에 따르면 완전시민경선과 당원경선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전주시장 경선에 대해 중앙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타협적인 ‘시민·당원 5대5’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임운상, 이현웅 두 후보가 주장하는 방식을 한 발씩 양보하라는 것으로 후보들이 수용할 경우 빠르면 주말께 최종 방식을 예비후보자에게 통보하고 경선을 마무리 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주시장 브리핑룸을 찾은 임운상 후보는 “양보를 요구하는 중앙당의 5대5 방식에 따르겠다”고 수용의사를